

10년째 지지부진 광양 세풍산단 개발 지연 왜?

광양시-광양만청, 재정부담 줄다리기 하세월

광양만청 “지금도 개발 적기 불구 市는 부정적 입장”

市측 “높은 부담금·미분양 장기화땐 보완책도 없어”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 단지가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또 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광양시에 조성비 일부에 대해 책임보증에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광양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양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개발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마친 세풍산단 조성비와 관련 미래에셋이 4000억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광양시 30%, 광양만청 15%, 시공사 30% 등 모두 75%에 대해 분양보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광양만청은 애초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했으나 이 기관이 광양시의 100% 분양보증을 주장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광양만청은 2020년 한시기로, 신용등급이 낮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의 보증이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광양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광양시가 너무 부정적인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신규 산단을 지금 개발해야만 향후 경기가 풀리면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분양이 안 될 경우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1350억원”이라며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미분양이 장기화됐을 때 보완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양시의 대처는 순천 해룡산단 미분양 물량 100%를

부담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순천시나 갈사만 산단 조성을 조건으로 10만평을 선 인수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 용지에 대해 600억원 담보대출 보증에 나선 하동군 등 인근 시·군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양만청은 세풍산단 조성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의 자체 물동량 확보, 대규모 공장용지 부족 해결, 인구유입, 8900여 명의 고용효과, 1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광양시를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47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5km의 면적에 들어서는 세풍산단 내에는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전자제품, 식품 등 업종들이 들어서며, 기반시설도 모두 국비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백두대간 동계캠핑 팸투어 ‘청정수도 곡성 백두대간 동계캠핑 팸투어’에 참가한 가족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압록유원지 등 곡성군내 3개 오토캠핑장에서 열린 팸투어에는 전국에서 캠핑 동호회 177팀, 742명이 참가했다. <곡성군 제공>

한파에 남해안 어류 양식장 비상

고흥 돌돔 25만마리 폐사 등 피해확산 우려

저수온에 약한 가두리 양식장 철저 대비를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남해안 어류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다. 한파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당국의 예보에다 이미 어류 동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등에 따르면 여수해역 일대 수온이 섭씨 8.8도로 전년대비 0.4도, 평년대비 0.8도가 낮은 저수온이 형성되고 있다. 다음달 하순까

지는 평년대비 수온이 1~2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한파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어류의 폐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 지난 14일에는 고흥 도양읍 화도리 어가 3곳에서 돌돔 25만여 마리(3억 5000만원)가 폐사하는 등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초에도 전남에서 돌돔 등 80여만 마리가 폐사해 85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 일대 양식장에서는 돌돔의 서식 한계수온인 섭씨 7도 이하 저수온이 수일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안 지역은 돌류와 우럭,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 8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로, 특히 겨울철 저수온에 약한 돌류가 대부분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돌류와 농어 등 어류의 가두리, 축제식(제방양식기) 양식장, 육상 배양장에서는 동사 방지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대상 양식 생물의 조기 출하나 월동장 확보 등도 당부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관광객 1000만명시대 연다

市, 순천정원박람회 연계 유치 등 종합대책 마련

여수시가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수는 28일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 관광객 여수 유입을 주요 과제로 해

정원박람회장엔 관광안내 홍보관을 운영 하고 박람회장~여수 간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중이다. 특히 다음달 수도권 여행사와 시도 관광협회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 정원박람회 관광객의 여수 관광을 유도할 방침이다. 홍보물과 팸

플릿 등을 계절과 주제별로 다양하게 제작하고, 광역도시권에는 대형 이미지 광고도 게재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시작으로 주요 관광 컨벤션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수화 여행단,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도 잇달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관광을 주제로 하는 TV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

서는 등 차별화 전략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다음달 8일 전면 개통되는 이순신대교와 국가 산단, 박람회장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 365개 테마 섬과 산단을 둘러보고 여수밤바다를 즐기는 야경상품, 여수테마여행철도 관광 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시작해 여행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수화여행단으로 달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관광을 주제로 하는 TV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

전북

농어촌 주택개량 물량을 2067가구 전국 최대

道, 1034억 들여 추진

전북도가 올해 주택개량 사업 물량을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배정받아 농어촌 주택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올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2067가구를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 1만 가구 가운데 20%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역대 최대의 물량이다. 용자비용만도 1034억원에 달한다. 197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농어

촌 지역에서 주택을 개보수할 때 연 3%의 저렴한 이자로 최고 5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지방비(사업비의 20%) 부담도 사라져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주택과 이승복 과장은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목재와 콘크리트, 철근, 벽지 등 주택 개량에 쓰이는 각종 재료의 구입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씨감자 조직배양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조직배양한 씨감자. 연간 1000여t의 씨감자가 필요한 남원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씨감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시민단체, 서남대 정상화 공동 노력

공대위, 진상조사 서명 운동·교과부 항의 방문 추진

남원시는 28일 “서남대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 학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학교 정상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남대 김승국 부총장은 학교 측의 대응계획을 설명하고 정상화를 위해 대학구성원과 함께 최경철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병체 문화위원장·조운기 정책자문위원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서남대를 운영 비리로 폐쇄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2000년 서남대의 실소유자의 부도덕성, 교과부의 감독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1만여 남원시민의 서명을 받아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와 대책위 등은 교과부에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단 신

남원시, 온누리상품권 5% 보전 올해도 실시

남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5% 보전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28일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배인 25억원의 높은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는 온누리 상품권 5% 활성을 위한 보전에 나선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꾸준히 판촉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시산하직원들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행사와 지역 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각종 행사 시 격려품이나 시상품 및 명절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군산시, 내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군산시는 28일 “사회갈등 해소, 집단민원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미리 인접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 관계자에 통보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농가소득 보전금 지난해 109억 지급

순창군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난해 5000여 농가에 10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쌀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논공 생산·유통장려금,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 6개 분야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이 가운데 쌀직불금 30억원만 다음 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류산업 발전과 쌀 대체작목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논공 생산유통장려금으로 988개 농가에 16억원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64개 농가에 1억2000만원을 건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내달 14일까지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청을 포함, 5개반 18명의 정비반을 구성한 뒤 권역을 정해 사전·집중·마무리 3단계로 나눠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통광고물과 미용양육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특히 설 연휴 1주일 전인 내달 1일부터는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경찰, 실종 아동·실종자 찾기

‘아동지문 사전등록제 활성화’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실종아동과 실종자 등의 신속한 귀가와 발견을 위해 아동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현장 방문해 아동지문 사전등록을 홍보하고 등록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현장등록 외에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기본정보를 등록(지문 제외)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현장방문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음달 8일까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년제로 신청하면 된다. 홍익대 전북경찰청장은 “아동지문 사전등록제를 통해 아이가 실종됐을 때 전국 각지에서 아이의 위치를 즉시 조회해 신속하게 조처할 수 있다”면서 “아동 실종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들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